

---

**제12차 국제재정포럼**  
**[The 12th Korea-OECD International Forum on**  
**Budgeting]**  
**출장 보고서**

---

**2024. 10. 4.**

## 1. 출장 개요

□ 일시: ' 24.9.23(월)~9.27(금), 3박 5일(출·입국일 포함)

\* 원장님: 9.24(화)~26(목), 2박 3일

\*\* 노단 연구원: 9.24(화)~27(금), 2박 4일

□ 장소: 프랑스 파리

□ 출장자: 조동철 원장, (재정·사회정책연구부) 김인경 부장, 신승룡 부연구위원,  
권수연 전문연구원, (대외협력실 성과확산팀) 전해원 전문연구원, 노단  
연구원

## 2. 출장 목적

□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 제12차 국제재정포럼 '에 연사로 참석 및 행사 개최  
진행 지원

\* 상기 행사는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KDI와 OECD가 공동주관하는 국제포럼으로  
KDI는 동 행사 개최 관련 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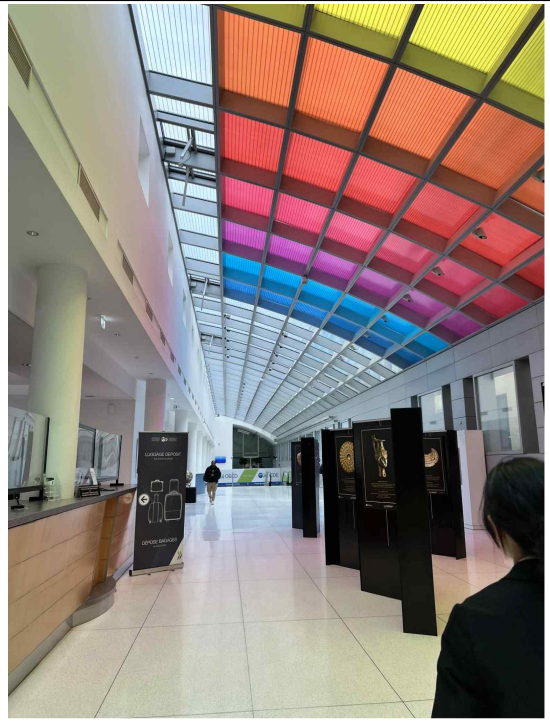
## 3. 출장 일정

□ 9.23(월) - 김인경, 신승룡, 권수연, 전해원  
- 11:10 인천 출발 → 18:30 파리 도착

□ 9.24(화) - 김인경, 신승룡, 권수연, 전해원  
- 11:00~12:00 행사장 사전 점검 및 동선 확인  
- 13:00~14:00 OECD 실무진 행사 운영 관련 업무 협의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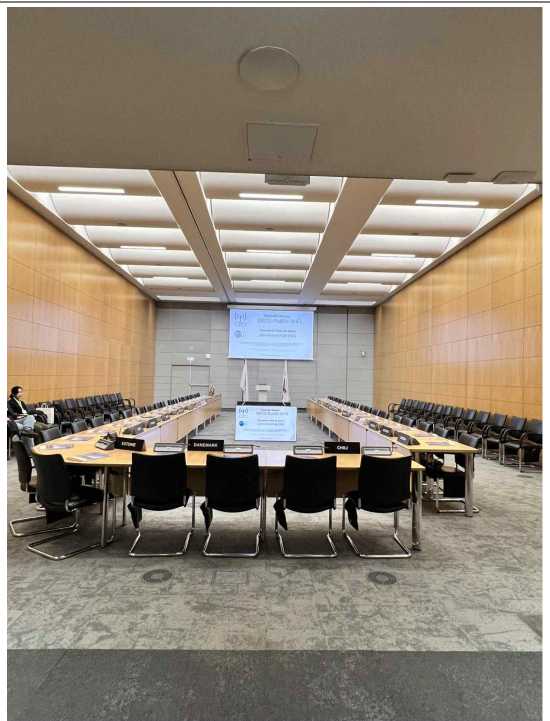
OECD 출입구



OECD 컨퍼런스센터 전경



CC5 내려가는 길



행사장 전경

□ 9.24(화) - 원장님, 노단  
 - 11:10 인천 출발 → 18:30 파리 도착

□ 9.25.(수): 행사 1일차 참석 및 개최 지원

09:00~09:30('30)	등록 및 네트워킹
09:30~10:00('30)	<b>개회식</b>
개 회 사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Janos Bertok   OECD 공공행정 부국장
환 영 사	최상대   주OECD한국대표부 대사 조동철   KDI 원장
10:00~10:30('30)	커피브레이크
10:30~12:00('90)	<b>[세션1]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b>
발 제	Lars Ostergaard   덴마크 재무부 예산부국장 Étienne Genet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고위급 전문가 김완수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
토 론	Andrew Blazey   OECD 공공관리예산 부부장 Simon Duncan   뉴질랜드 재무부 및 주OECD뉴질랜드대표부 참사관
12:00~13:30('90)	<b>오 찬</b>
13:30~15:00('90)	<b>[세션2] 성장동력 및 사회이동성 강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b>
발 제	Ronnie Downes   아일랜드 기업통상고용부 무역 총괄 前 공공지출개혁부 차관보 박환조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 Stephane Jacobzone   OECD사무국 참사관
토 론	Helene Durocher   캐나다 재무부 및 주OECD캐나다대표부 참사관 Peter Johnson   호주 재무부 및 주OECD호주대표부 공사참사관
15:00~15:30('30)	커피브레이크
15:30~17:00('90)	<b>[세션3] 역동경제와 재정준칙</b>
발 제	Lucia Piana   EU집행위원회 경제재정총국 재정정책감독부 부국장 Thomas Braendle   스위스 연방재무부 경제·재정정책분석부장 Delphine Moretti   OECD 선임정책분석가
패 널 토 론	Tomoyuki Omori   일본 재무성 및 주OECD일본대표부 참사관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17:00~20:00('120)	<b>리셉션</b>

- 9.26.(목) - 김인경, 신승룡, 권수연, 전해원, 노단
  - 행사 2일차 참석 및 개최 지원

09:30~11:30('120)	<b>종합토론</b>
종합토론	<p><b>(좌장)</b>  <b>Barry Anderson</b>   前 미국 예산관리국(OMB) 예산부국장  <b>신승룡</b>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b>Ronnie Downes</b>   아일랜드 기업통상고용부 무역 총괄      前 공공지출개혁부 차관보  <b>Étienne Genet</b>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고위급 전문가  <b>Lars Ostergaard</b>   덴마크 재무부 부예산국장  <b>Lucia Piana</b>   EU집행위원회 경제재정총국 재정정책감독부 부국장  <b>Thomas Braendle</b>   스위스 연방재무부 경제·재정정책분석부장</p>
11:30~12:00('30)	<b>폐회식</b>
폐회식	<p><b>유병서</b>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p> <hr/> <p><b>Jon Blondal</b>   OECD 공공관리예산부장</p>

- 귀국: 21:00 파리 출발 → 익일(9.27) 15:55 인천 도착

- 9.26.(목) - 원장님
  - 09:50 파리 출발 → 12:00 부다페스트 도착
  - \* 제12차 국제재정포럼 이후 헝가리 EIPP 최종보고회 참석을 위해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이동

## 4. 주요 논의 내용

### 세션1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 **발표 1. Lars Ostergaard 덴마크 재무부 예산부국장**

- 재정여력은 구조개혁, 고용증가, 세법 개정, 생산성 증대와 관련된 중기 계획(medium term plans)에 따라 변화하거나, 단기적으로는 지출검토, 재정지출 일몰, 연간 생산성 증감 등 재정지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덴마크 구조개혁 사례를 살펴보면, 시기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1980년대: 긴축재정정책과 유로화 연동의 고정환율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임금을 인플레이션에 연동시키는 정책을 폐지
  - 1990년대: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전환하고, 실업수당 축소와 민간 연금의 지속적 구축 등을 도모
  - 2000년대~2011년: 조기퇴직제도를 축소하고 퇴직 연령을 기대수명과 연동하는 퇴직 제도에 집중
  - 2010년대: 실업수당 관련 고용개혁, 연금개혁, 중기계획에 기반한 엄격한 재정지출 상한 적용 등을 실시
  - 현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급여 지원, 소득세 개편,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 수당, 학생 장학금 제도 개선 등 노동공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임.
-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덴마크는 2014년부터 예산법을 시행하며 예산균형 규칙과 지출한도를 도입함.
  - 이의 특징은 4년 단위로 중앙 정부, 지자체 단위의 지출한도를 의회가 설정하며 단, 고용 관련 수당과 투자, 경기침체 시 경제 안정화를 위한 투자는 지출한도에서 제외함.
- 덴마크는 매년 예산안 수립 시 지출검토를 실시함. 각 해의 예산안은 다음 해의 재정여력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재정부는 정부 우선순위 과제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각 부처의 예산편성을 면밀히 검토함.
  - 단, 국방 경찰, 사법, 철도 등 일부 분야는 4~5년 다년도 합의를 통해 우선순위 및 조직 차원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부처 및 기관 예산을 보장하되,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방향을 취함.

## 발표 2. Étienne Genet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고위급 전문가

- 프랑스의 2024년 성과기반 예산제도는 정치적 목표에 중점을 둔 사회경제적 지표,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는 사용자 기반 지표, 공공 지출의 효율성을 모니터링하는 납세자 기반 지표로 다차원적 접근을 취함.
- 성과기반 예산제도는 (3월) 성과지표 가이드라인 회람 → (3~5월) 성과지표 변경에 대한 논의 → (6~8월) 새로운 세부 성과지표 도출 및 목표 설정 완료의 과정을 거침.
  - 2024년 성과지표 변경에 관한 논의에서는 성과지표가 재정 배분 구조를 결정하는 데 활용도가 낮고, 정치적 목표에 중점을 둔 지표가 절반 이상이며, 목표보다는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지적됨.
- 프랑스의 지출검토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공공지출과 재정적자 하에서 구조개혁이나 신규 투자가 필요한 분야와 예산절감이 가능한 분야를 식별하는 기능을 하며, 분석 기준은 관련성,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명확성 및 책임성으로 설정됨.

## 발표 3. 김완수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

- 한국의 재정지출 상황, 지출효율화 필요성, 현재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향후 방안
  - 최근 정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저출산·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는 한편,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등 역동성이 저하되는 어려움이 있어 미래 재정운용에 도전과제로 작용하고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4가지 주요 지출효율화 정책
  - ▲ 총사업비용관리 시스템, ▲ 신규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 국민관심도가 높은 유사사업 묶어 추진 과정 및 성과 분석하는 심층사업평가(IEBP), ▲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지출 재구조화
    - 이 중 심층사업평가는 예산의 지속적 지출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정량, 정성적 평가를 하는 것임.
    - 지출재구조화는 지출 우선순위를 검토해 부처별 조달이 아니라 통합 조달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임. 유사 중복사업을 정비(통폐합 및 실수요 재점검하여 집행 방식 재조정) 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해 2023~2025 연평균 20조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

□ 향후 추가 도입 예정인 4가지 제도 소개

- ▲협업예산, ▲조세와 재정지출의 연계, ▲AI 활용한 보조금 부정수급 탐지, ▲재정준칙
- 협업예산: 범부처 현안, 예를 들면 K-콘텐츠와 관련된 수출 밸류체인과 관련하여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이 협업하는데,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각자 책임을 지고 협업예산을 운영하는 제도
- 조세와 재정지출의 연계: 분류체계 표준화하고 관리를 통합하는 것
- AI 활용한 보조금 부정수급 탐지: 올해 8천 건 적발, 경험이 누적될수록 성과가 증가할 것
- 재정준칙: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부채비율이 GDP의 60% 이상인 경우 관리재정수지를 2% 이내로 관리하는 준칙을 국회에 제출했음. 이것이 원활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임.

**세션 2 「성장동력 및 사회이동성 강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

**발표 1. Ronnie Downes 아일랜드 기업통상고용부 무역 총괄, 前 공공지출개혁부 차관보**

- 기업(business)은 OECD 국가 GDP의 72%, 고용의 70%, 기술투자의 85%를 차지하는 등 경제 발전에 중요
- OECD는 1)재정건전성 하에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예측 가능한 예산 배분, 2)중기(mid-term)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 예산 편성, 3)인프라 개발 필요성, 부문별/사회적 우선순위 평가 등을 통해 비용 효율적·지속적인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 마련을 권장
-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확실성, 유연성, 인프라가 필요
  - 기업전략은 통상 다년 계획이므로 해당 기간 정부 지원을 예측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함.
  - 기업은 자연재해, 팬데믹, 브렉시트 등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므로 핵심 공공 지원과 비핵심 공공 지원을 구분

- 인프라는 에너지, 물, 교통과 같은 물리적 요소와 교육, 법률, 규제, 직업 훈련 등 무형의 요소도 중요
- 기업 지원은 사업 타당성, 지원 기한, 성별 평등, 사회적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이루어져야 함.

## 발표 2. 박환조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

-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재정정책
  - 경제 역동성에 기반한 빠른 성장이 있었던 과거와 달리 성장률, 생산성 둔화, 기술혁신 등 역동성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교육, 기업생태계 역시 과거와 달리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임.
  - 한국 정부는 7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함.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생산성과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한 R&D 개편을 통한 혁신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음.
    - 미국 등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기 위해 양적 팽창보다 질적 향상이 필요하므로 저성과 비효율 R&D 예산을 2024년 재평가하고 미래 선도기술, 청년 연구자 지원 등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함.
- 생산성 제고
  - 한국은 Fast R&D라는 이름으로 R&D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에 투자했고 세계적인 기관들과 첨단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기술협력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탄소 중립을 선도하기 위한 R&D 투자 중임. 성과를 도출하려면 안정적으로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연구 환경 개선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함.
  - 혁신도전 책임연구자가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개척형', 토너먼트로 국가대표 선발하는 '경쟁형', 독자적으로 연구자들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형' 등으로 연구 체계를 개편했음.
- 사회 이동성 개선
  - 사회 이동성은 세대 내, 세대 간 이동성의 합으로서 역동경제에서 중요한 축임. 계층 이동성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 대학 진학률 감소, 경제활동 참가율도 OECD 평균보다 낮음.
  - 정부는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함. 경제성장과 사회 이동성 선순환하는 역동경제 구현이 주된 내용임. 양질의 일자리 늘려서 소득상향 기회를 확충 → 한국의 경제 활동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는 것, 이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중장년 여성 위주로 지원하려고 함.

- 교육격차 완화: 대학생 대상 주거장학금, 적금, 저소득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을 통해 교육이 사회 이동성 사다리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함.
- 미래세대를 위해 청약 당첨 시 분양 대금을 저리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퇴직연금 및 국민연금 조기 수령 등을 검토하고 있음. 이 외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혜택 마련 등을 통해 사회 이동성 정책을 마련하였음.
- 앞으로도 R&D 투자 개편과 사회 이동성 증진을 위한 재정 노력을 지속하겠음.

### **발표 3. Stephane Jacobzone OECD사무국 참사관**

- 한국의 빠른 고령화는 건강, 노후 소득 등 공공 지출을 늘릴 것이며, 이를 위해 재정 여력 확보·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출 재구조화가 필요
  - 재정지출 재구조화는 다부처 협력, 남녀 간 공정한 자원배분을 위한 성인지예산(gender budgeting) 편성, 공공인프라 확충, R&D 투자 강화 등을 통해 가능
    - 복지부-기재부의 쟁점 공유, 지출 검토에 대한 공동의 이해, 인력 교류 등을 시도할 필요
    -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출산을 유지, 사회 이동성 강화 차원에서 접근
  - 재정지출은 명확한 성과 목표 설정, 사전·사후 영향평가, 예산편성의 성별 평가 등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음.
  - 건강 관련 공공 지출은 의료기술 사용을 촉진하고 공급자 간 경쟁·공동구매, 수요자-공공 간 비용 분담, 복지부-기재부의 협력,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으로 건전화될 도모
    - 특히 부유한 고령층이 많아질수록 의료소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수요자-공공의 비용 분담이 재정 건전화에 중요하겠음.
  -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노후소득 보장시스템은 노인 빈곤, 금융시장 리스크,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 주택연금 등을 고려해서 설계

### 세션 3 「역동경제와 재정준칙」

#### 발표 1. Lucia Piana EU집행위원회 경제재정총국 재정정책감독부 부국장

- 최근 EU경제운영틀(EU economic governance framework)은 재정 지속가능성과 회복적·포용적 성장을 위한 투자 간 균형을 지향하면서 5가지 핵심 원칙을 표방
  - 회복적 성장이라 함은 COVID-19과 같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에 더 잘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
  - 원칙 1: 중기접근법(medium-term approach)은 재정정책, 투자, 개혁을 국가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하는 것임.
    - 국가별 회계연도에 맞는 4~5년 기준으로 수립하되, 공공부채를 낮추거나 신중한(prudent) 수준을 포함하고 투자, 개혁 내용을 담아야 함.
    - EU집행위원회가 재정 궤적(fiscal path)을 고려한 부채 지속가능성 및 투자, 개혁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 EU 공통적이며 투명한 틀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을 평가 → EU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중기재정계획에 담긴 재정 운용, 투자, 개혁이 감독(surveillance)의 기준이 됨.
  - 원칙 2: 회복적 성장 지향적 투자 및 EU 우선순위에 부합한 재정정책을 통해 점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부채 감소를 도모
    - 단, 회복적 성장 지향적 투자 혹은 녹색·디지털 전환, 에너지 안전 등 EU 공통 우선순위에의 투자, 부채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 등을 추진할 때 중기재정계획은 4~5년이 아닌 7년 기준으로 수립할 수 있음.
  - 원칙 3: EU 공통의 틀에서 국가적 차별성을 허용
  - 원칙 4: EU경제 운영틀의 적용(enforcement) 강화
  - 원칙 5: 다양한 재정적 도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더 단순한 재정준칙 적용

#### 발표 2. Thomas Braendle 스위스 연방재무부 경제·재정정책분석부장

- 재정준칙은 예산 배분의 틀로써 의사결정권자 규율 부여, 지출 우선순위 설정, 중기계획 강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공공 투자·사회적 지출 위축, 구조개혁 저해, 재정준칙 우회 유인 부여 등을 초래한다는 우려도 존재
- 재정준칙에 관한 실증연구를 요약하면, 재정준칙은 재정수지·공공지출 변동성·공공 부채를 개선하며, 유연하게 설계되었을 때 공공 투자를 약화시키지 않고 경기 둔화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편, 헌법에 법적 토대를 두는 것과 공공부채 감소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

- 효과적 재정준칙의 특징은 헌법에 토대를 두되, 유연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단순함.
  - 재정준칙이 유연하게 설계되었다 함은 경기 순환성을 고려하고 외생적 충격 등 예외적 상황에 대응하며 필요한 공공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음을 뜻함.
  - 단순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쉬워 의사결정권자 간 협의가 용이함을 뜻함.
- 아울러 정부 차원의 재정 투명성은 재정준칙의 긍정적 효과를 강화할 수 있음.
- 2000~2021년 재정준칙 관련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재정준칙감독위원회 운영, 헌법에 재정준칙 근거 마련, 예외조항 수립, 경기조정 재정수지 활용 등을 취한 국가가 증가
- 스위스는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다르게 정부 부채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데, 스위스 재정준칙인 부채제동장치(Swiss Debt Brake)가 헌법 기반인데다, 경기 대응(counter cyclicity)과 부채증가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사전에 규정된 예외조항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된다는 점,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한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음.
  - 경기대응적 재정준칙이 아니라면 호황 시 지출이 증가하고 불황 시 지출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스는 GDP>잠재성장률일 때는 정부지출을 줄이고 GDP<잠재성장률일 때는 정부지출을 늘림.
    - 스위스 재정준칙 하에서는 예산 및 지출이 경기조정 수입(cyclically adjusted revenue) 이하로 편성되어야 함.
  - 재정 부채가 지속가능 수준을 넘어 증가하면 부채 감축 의무를 부과

### 발표 3. Delphine Moretti OECD 선임정책분석가

- 최근 OECD국가의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고 정부 부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정부지출은 경제성장 견인 분야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정부 부채는 재정목표(fiscal objectives)나 재정준칙(fiscal rules)이 잘못 설계되어 있거나 중기재정운용계획 집행 절차의 구속력이 약해 발생할 수 있음.
  - 재정목표는 재정준칙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부, 의회의 정치적 결정으로 설정

- OECD 국가의 재정목표나 재정준칙의 근거는 헌법, 법률, 정치적 합의, 대통령령·시행령 등 하위 법규로 대별되는데, 국가별 단순 비교 시 법률, 정치적 합의, 헌법, 하위 법규 순으로 정부 부채가 높음.
- 정부는 명확한 재정목표·준칙 수립 및 다년도 재정지출 기준선·하향식(top-down) 지출한도 설정 등을 통해 재정 지속성과 재정 효율화를 도모해야 하며, 세부적으로 재정목표·준칙의 현실성과 단순성, 중기재정운용계획의 효과성, 재정목표·준칙,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집행 가능성(enforceability)은 자동 조정장치나 제재와 같은 적절한 기제와 더불어 정치적 의지, 강력한 독립재정위원회에 의해 구현됨.
  - 한편, 최근 재정목표·준칙은 녹색 투자 및 교육 분야 지출은 늘리되 다른 분야의 재정수입 증가와 재정지출 감소를 도모하고, 분야별 준수 목표를 각기 설정